

MBC 100분 토론-노 대통령에게 듣는다

⑤ 빈곤해소 잘 못한 점 국민에 죄송

- 일자리 창출 최선 다할 것...부동산정책 정부에 신뢰 주길 -

■ 시민논객과의 대화

▲ 진행자 손석희 = 우리 시민논객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 LG텔레콤 대리 김현익 = 제가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언급하신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그리고 FTA,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참여정부 내내 계속 국가적인 이슈로서 그런 갈등이 계속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수·진보 간 갈등도 갈등이지만, 열린우리당,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간혹 다른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릴 때, 같은 편이신 대통령께서 혹시 당황하신 적은 없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당 모두 생각 같을 수 없어...당내 다른 목소리는 거쳐야 할 과정”

노무현 대통령 = 당황이 되죠. 나도 흔히 말하는 5공·6공 독재 정부의 시절을 지내온 사람이고, 또 흔히 말하는 ‘3김 시대’ 라고 하는 권위의 시대를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모든 당권을 쥐고 공천권까지 다 쥐고 조직을 통제하던 시절을 지내왔던 사람이라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 저한테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은 일사분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때때로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1초 안에는 일사분란 해야 되는데, 그런데 2초, 3초 생각하면은 ‘아, 아니지. 세상이 바뀌었지’ 그게 제 상태거든요.

그래서 처음 딱 부닥치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 과정을 다 지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같은 당이라고 생각이 다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를 수 있고요. 특히 FTA 문제는 나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주제입니다. 작통권은 아마 예측했을 것입니다. ‘노무현이라면은 틀림없이 작통권 전환을 들고 나갈 것이다’ 라고 예측했을 것이고, 또 안 했던 사람도 ‘아, 그 예측했던 대로다,’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마는 FTA는 좀 예상 밖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을 제가 오히려 이해하고 설득해야죠. 왜냐하면 의외의 선택은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 숙명여대 경영학과 4학년 서강리 = 안녕하세요. 시민논객 서강리입니다. 저는 취업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대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결국 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3년 반 동안 수없이 많은 청년 실업 대책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청년 실업을 다루는 정부 부서가 열한 개 부처에 이르고, 지금까지 발표된 청년 실업 대책 171건에 들어간 예산이 약 2조4700억 원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데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제자리걸음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고,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대통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용정책 성과 나오려면 시간 필요...일자리 창출 노력 계속 할 것

노 대통령 = 예, 열한 개 부처가 된다는 것을 혼란과 난맥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의 정책이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오늘날 보편적 현상입니다. 심지어 외교부에서도 인턴을 많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도 청년 실업 대책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문화관광부에서도 얼마든지 이 청년 취업,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노동부는 주무부처이고요. 열한 개 부처에 관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거 왜 효과가 안 났냐?’ 이랬는데, 만일에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나빠졌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조4000억 원이라는 것은 이 돈이 청년 실업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마는 때로는 국민 복지를 위한 돈인 경우도 있고, 또 문화 진흥을 향한 경우도 있고, 문화 진흥 영역에서 일자리 만들면서 일자리 정책일 수 있는데, 이제 행정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 말할 때에는 일자리 만드는 예산 다 모아서 설명하고, 또 같은 예산을 가지고 문화 진흥 예산이라고 설명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있지마는 그러나 그만큼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한 것이 지금 수준이라도 유지하는 것 아니겠느냐.

모든 정책이 올 봄에 시작하면 가을에 바로 정책이 성과가 나는 정책은 오히려 적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가지고 엄청난 일자리도 많고 수출도 많이 하는데, 반도체 그거 정책을 시작한지 오래 됐고요. 우리가 CDMA 단말기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130억 넘는 그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게 CDMA 그 기술 개발한 것이 이미 그것은 문민정부 시절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것처럼 정책이라는 것은 오랜 회임 기간이 걸리고, 우리가 지금 고용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고용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 과정만 해도 벌써 1년 걸려야 한 사람이 나오고, 한 3년 돼야 남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 기다립시다.

뭐 지금도, 지금도 우리 한국의 일반 실업률이나 청년 실업률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주 낮은 쪽에, 아마 제일 낮거나, 이런 수준입니다. 물론 비정규직이 많고 품질이 좋지 않은 점은 있지만, 그냥 실업률 통계로만으로는 우리가 아주 좋은 나라인데, 그러나 결코 나는 좋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품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지는 않고요. 장기·단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비에스상사’ 대표 배두성 : 안녕하세요? 시민논객 배두성입니다. 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강남 잡겠다고 대책을 세우면 강남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더 들쭉, 강북이 들쭉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정말 서민들이 정부 정책에 실망하고 있는 지금 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판교나 파주 신도시, 또 은평 뉴타운 등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 정책 반드시 성공...국민들도 정부에 협력과 신뢰 보이길

노 대통령 = 예, 부동산 정책은 아직 결판이 다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전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통계로 보면 0.6%정도 올랐다고 돼 있지만 지역적으로 많이 오른 곳

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우리가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집을 살 사람이 전세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값이 올라간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 계절적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값이, 단기적으로나 또 장기적으로나 전세 값이 우리 서민들을 정말 고통 속으로 90년대에 우리가 전부 엑소더스(exodus)하던 그런 시대에 자살하고 하던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관리해 내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두고요.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협력을 좀 해 주십시오. 신뢰도 좀 해 주시고요. 부동산 정책이 이전의 부동산 정책과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는 완전히 부동산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등기하는 소위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이제는 투기 소득을... 세금을 뭐 많이 내고 적게 내고가 아니고 한 푼도 숨길 수가 없는 시대로 갑니다, 이제. 그 전에는 세율이 높았다 낮았다 많지만 우선 다 숨길 수 있었습니다. 신고를 거짓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투기 소득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보유세 정책은 수십 년 동안 보유세, 보유세 우리가 노래를 불러 왔는데, 생각 있는 사람은 노래를 불러왔는데, 일단 보유세 골격을 갖추었습니다. 지금 조세 저항 때문에 속도를 오히려 조금 늦추고 있는데요, 보유세 이게 아주 기본이거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하기는 뭐 세금만 때려 먹이고 어찌고 하는데... 결국 투기 소득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투기 소득은 숨길 수 없고,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계

속 나오게 돼 있고,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 금융 상품 투자보다 확실하게 소득이 떨어질 겁니다. 확실하게 수익이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사 놓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부동산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그리고 이 법 바꾸는 것이요, ‘부동산 정책 실패, 실패’ 하니까 이 법에 대해서 별로 가치 없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막상 이 법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요, 시민사회에서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못 바꿉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수사과 고영민 = 시민 논객 고영민입니다. 저는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수사 경찰관인데요, 제가 수사상 만나게 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가 최근 듣기로는 한결 같이 죽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언론 보도에서도 부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 가고 있다고 그러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비전 2030 같은 장기적인 대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없는 사람들한테는 당장 오늘 하루 살기가 힘들다고 하거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바다 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장도 아마 그것 때문에 성행한 것 같습니다. 그 폐단으로 한탕주의도 아마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요. 대통령님께서서는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먼 미래가 아닌 당장 내가 이것만큼은 확실히 약속할 수 있다, 서민들한테 보내 줄 수 있는 희망 메시지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기부양은 부작용 커...소득분배·일자리 창출에 만전 기할 것

노 대통령 = 예, 제가 제일 아픈 부분을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양극화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약간 벌어졌습니

다. 특히 2004년에 많이 벌어졌거든요. 2005년, 6년은 조금씩 다시 수렴되고 있습니다마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내 임기 2003, 4년에 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너무 책임감 느끼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숫자도 제가 한 명도 줄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늘었고, 영세 자영업자 숫자도 더 늘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근데 그 안에 절대 빈곤도 다 들어 있는데요. 절대 빈곤이라는 것은 약간 변명할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 생계비를 정부에서 결정, 정부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최저 생계비를 높이면 절대 빈곤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올라가니까 늘어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실제로 절대 빈곤이 더 늘었는지 아닌지는 이제 좀... 어떻든 간에 기준도 높일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높였고, 그래서 또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하고 싶었던 부분이 다 안 되고 있으니까 저도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합니다. 하는데, 사실 이게 사람들이 다 이거 금방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다 얘기하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경기 부양책 쓰면요, 경기를 부양시키면, 금방 이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면 한 번 더 또 나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말하자면 정부가 제1차적으로는 자기의 직장을 통해서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제2차적으로는 정부가 거둔 돈을 가지고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제2차적으로는 재분배를 강화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정부 뭐 했냐?’ 라고 하면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

럽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산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경제 예산이 빠르게 복지, 사회 정책, 사회 투자 예산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선 어려운 사람들이라도 좀 받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우선 경찰관이 가장 일선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걸 질문 주제로 삼아 주신 것이 그래도 참 고맙게 느껴지고요.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이화여대 김경진= 안녕하세요. 시민 논객 김경진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인사 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관되게 이어져 온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강금실 전 장관이나 한명숙 총리, 그리고 최근의 전효숙 현재소장 후보까지 여성 리더 등용에 상당히 적극적이셨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최근 여성 정치인들의 행보가 상당히 활발해졌는데, 차기에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여성 기용 늘린것은 ‘기회’ 주기 위한 것

노 대통령 = 예, 그 옛날에 처음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쯤에는 저의 여성관이라든지 정치에 관한... 여성 정치라든지 여성 사회 활동에 관한 관점이 상당히 진보적이었는데, 그 뒤 몇 년 지나고 나서 대통령 후보 때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남들보다 좀 유달리 진보적인 수준이 안 되더라고요. 말하자면 다른 분들의 여성 정치의 사회 활동에 대한,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특별히 여성주의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 되도록이면 여성들 기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꾸만 ‘여성이 조직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기회를 드리고 어떻든 한번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일을) 할 수 있고, 여성이 이제 나가면 후배들을 끌어줍니다. 여성 한 사람이 있으면 후배들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밀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한번 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뭐 공치사할 만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 진행자 손석희 =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여성 정치인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쭙어 봤습니다.

노 대통령= 아, 예, 그 점은 중립입니다. 그건 누가 하더라도 저는 좋은 대통령이면 된다, 꼭 뭐 대통령 자리까지 여성에게 우선권을 준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어떻든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면 좋겠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중립입니다.

▲ 인피언컨설팅 R&D팀 과장 하인숙 = 예, 시민논객 하인숙입니다. 저는 연관된 질문 두 가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권 탄생에 기여했던 국민적인 지지가 계속해서 하락하거나 이탈했다는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지지 기반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소신 있게 밀고 나가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여 지지율 하락에 의해서 혹시 추진하지 못했던 정책이나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 듣고 싶고요. 연관한 질문으로는 지금 대통령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정책 중에서 다음 정권 혹은 다음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연결하여 발전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듣고 싶습니다.

참여정부 장기정책 많아…사법·국방개혁, 전자정부 차기에도 이어지길

노 대통령 = 그 시민 논객이라고 이름표만 그렇게 붙여 놓은 줄 알았더니 수준이 아주 수준 높은 논객인 거 같네요. 그렇지요. 마찬가지로입니다. 예를 들면 작전통제권, 이 문제가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89년, 90년, 94년에 다 하던 건데, 별로 그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상입니다. 저에 대한 애정이나 신뢰가 낮아졌기 때문에, 제가 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은 것이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사법 개혁 같은 것은 문민정부에서 시도하고, 또 국민의 정부에서도 시도하고 또 넘어왔는데, 국회에 법이 가 있는데, 덮어놓고 안 하거든요. 안 해도 국민적 압력이 없습니다. ‘왜 국회가 법을 다루지 않느냐?’ 국민적 압력이 있어야 국회가 그걸 그렇게 못하는 건데, 압력이 없거든요. 국방개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개혁, 이것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생각 있는 군 지휘관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국방 개혁의 방향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국회에 가서 처박혀있고요.

사법 개혁 같은 것은 기한을 넘겨서 2009년에 로스쿨 만들려고 출범시키려고 했던 것이 지금 1년, 되더라도 1년 연기되게 돼 버렸는데, 국정이 이렇게 지체하거나 표류되어 있어도,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이런 걸 근 아홉 달 가까이 핵심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덮어 두고 있지요. 이런 것이 지지가 낮은 대통령의, 대통령의 불행입니다, 불행인데, 대통령의 불행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 지지가 낮은 건 제 책임이니까 누구한테 원망할 수도 없고, 제 탓이지요. 제 탓이고…… 그렇습니다.

꼭 그대로 갔으면 하는 정책은 내가 그동안에 애써했던 것은 다 그냥 갔으면 싶지요. 어느 것 하나 안 그런 게 있겠습니까? 다 또 걱정스럽고…. 왜냐하면 장기 프로젝트들이 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행정도시 문제도 그렇고 공공 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이런 장기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제가 청와대에서 채택했다가 정부에 채택하고 있는, 소위 디지털 업무 관리 시스템, 소위 전자 정부의 핵심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데, 디지털 업무 관리 시스템 같은 것이 그건 제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지원’ 이라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좀... 다른 건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법으로 뒷받침되어 있어서. 전자 업무 처리 시스템 이거는 법으로 뒷받침이 없어서 올해 어떻게든 뿌리를 심어 놓으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 진행자 손석희 =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민 논객들과의 시간도 다 끝났습니다.